정책토론회

이경재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 와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이상은)' 가 공동으로 지난달 1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교통시설개발과 국토환경관리에 관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대표인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 · 강화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은 국토환경관리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교통시설 개발에 의한 소음, 온실효과, 교통 혼잡과 사고, 동물의 이동성 단절, 자연경관 훼손, 그리고 대기오염 심화 등의 환경문제와 국토환경 자원의 낭비와 불균형 이용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재 의원의 사회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이훈기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운수 박사, 국토연구원 김선희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김진석 과장,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 김한영 과장,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병완 교수,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분석실 이수재 실장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점검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만옥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부문 에너지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피해가 연간 22조 3천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해 환경투자는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현재 주로 교통 SOC 투자에만 활용하고 있는 교통세를 환경친화적 목적세인 '교통환경에너지세' 로 개편하여 교통,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재원으로 일정기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훈기 박사는 경부고속철도를 사례로 고속교통시설에 의해 규모가 작은 도시가 큰 도시에 흡수되는 현상인 소위 '빨대효과' 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정차역이 대부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이며 지역 상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상권 유출현상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지리적 분포상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경제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연구원의 김운수 연구위원은 "서울시 전체 일산화탄소 배출양의 약 90%를 도로이동 오염원이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토연구원의 김선희 박사는 "도로사업 추진의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중심의 도로계획 및 운영체계에서 탈피, 이용자 중심의 교통시설투자 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